

일본의 국제화와 국제관계

장 달 중

I

지금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탈냉전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자체의 국제적 “자화상”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본이 방대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지정학적 역할을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 투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체제의 재편과 관계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의 재편과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냉전 후의 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일본의 국제 정치적 역할이 심각히 제기되기 시작한 계기는 아마도 1990년의 페르시아만 전쟁에서부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45년 이후 이때까지 일본의 국가이익이 직접 연관되어 있었던 지역분쟁들, 예컨대 한국전쟁, 대만방위, 한국방위, 월남전쟁, 1973년의 중동전쟁, 1980년대의 이란-이라크 전쟁 등이 발생했을 때조차 구체적인 지원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냉전 후 최초의 전쟁인 페르시아만 전쟁에 13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하고서도 “인적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자 우왕좌왕 끝에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협력 법안을 통한 “국제 공헌”을 시도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 이러한 의미에서 페르시아만 전쟁은 냉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문제를 현실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PKO나 PKF에 대한 참가의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이나 한국은 물론 서방세계까지도 이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대전 결과 전승국들이 일본과 독일에 부과했던 헌법상의 제약요건을 포함한 제도적 제약요건들이 페르시아만 전쟁을 계기로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PKO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불안이 짙고 있다. 이와같은 불안은 일본이 다름아닌 경

1 페르시아만 전쟁 당시 일본의 기여에 관한 논의는 재정적 공헌의 문제와 아울러 인적 공헌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적 공헌의 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페르시아만 난민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와 간호부 팀을 파견했으며, 전쟁 종결 후에는 페르시아만 기뢰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자위대 소해정 부대의 파견과 동시에 유엔 PKO 협력의 일환으로 PKF에 자위대의 참가를 가능케 하는 PKO 협력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柴垣和夫(시바가키 카즈오), “經濟大國日本の國際的課題,” 東京大社會科學研究所 編, 『現代日本社會(7): 國際化』(東京: 東京大出版部, 1992), pp. 363-65.

제·기술 중심의 국제적 역할에서 군사력 중심의 국제적 역할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불안인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의 국가이익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분명한 정의 없이 자위대의 합헌화(合憲化)와 PKO 협력법안 제정을 통하여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PKO 협력법안이 제정되고 무라야마 정권이 자위대를 합헌화했다고 하여 일본이 곧바로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서양의 “일본 두드리기의 근저”에는 인종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류의 계속된 주장이 아직도 일본 여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²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페르시아만 전쟁 당시 일본과 독일에 대한 국제적 비난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종차별의 문제로 정당화하려 하는 움직임에 있다. 독일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는 독일이 세계의 공범지역이나 동유럽에 대한 원조와 유럽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하여 국제적 역할을 전개해온 데 반하여, 일본은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염려나 불안에 전혀 대처함이 없이 미국을 만족시키는 데만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³ 냉전 기간 동안 이와같은 일본의 역할은 국제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일본의 이와같은 역할은 오늘의 국제정치적 역할 구조 속에서 더이상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의 거대한 경제력과 계속된 대미 종속적 국제역할 간에는 매우 어려운 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갭을 어떠한 방향으로 메워나갈 것인가가 국제화의 흐름 속에 일본이 전개할 국제관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의 흐름 속에 일본이 택할 앞으로의 국제적 역할을 고찰할 때 우리가 품게 되는 가장 심각한 의문은 일본의 의도가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일본이 전략적 의도를 갖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일 것이다.

II

오늘의 일본을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 비유하는 논조가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논조는 오늘의 일본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메이지 정부가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난 후에도 서구 열강들로부터 제대로 국가 대접을 받지 못했던 메이지 유신 후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메이지 정부는 막부 말기 서구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녹명관(鹿鳴館) 시대를 거쳐야 했다. 서구와 유사한 가치체계를 지닌 근대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메이지 정부는 녹명관에서 밤마다 연회를 개최

2 石原愼太郎, 盛田昭夫, 『Noと言える日本』(光文社, 1989).

3 Chalmers Johnson 著, 中本義彦 譯, 『歴史は再び始まった』(東京: 木鐸社, 1994), pp. 122-23.

하여 서양식 춤으로 서구화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던 것이다.

오늘의 일본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녹명관 시대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첫번째의 이유는 일본이 초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페르시아만 전쟁에 130억 달러나 되는 재정지원을 하고서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표(手票)외교”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다 빠른 길은 서구 각 국가들과 함께 해외파병을 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유엔의 틀 속에서나마 자위대의 해외파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로 대표되는 “보통국가” 일본론은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 표현일 것이다.⁴ “수출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국가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오자와의 이러한 견해는 이시하라 신타로 등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⁵

두번째로 우리는 메이지 근대화와 전후의 경제대국화를 관통하고 있는 중상주의 정책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는 도쿠카와 시대의 쇄국 속에 축적된 마치닌(町人) 자본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었으며, 전후의 경제대국화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 보호무역 정책을 통한 “쇄국적”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메이지 일본은 당시 시대적 조류였던 “부국강병”의 길을 선택하여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비로소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서구 열강과 대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메이지 당시 일본이 택한 중상주의적 부국강병의 길은 일본이 처한 국제질서 속의 선택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부국강병의 길은 일본이 스스로 만들어 낸 길이기도 했지만 또한 일본이 적응해야 할 국제질서의 기본 틀이기도 했다. 또 전후의 냉전 체제도 일본이 만들어 낸 국제질서라기보다는 일본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주어진(given)” 질서였다. 메이지 일본이 받아들인 국제질서의 체제가 있었듯이 전후 일본이 받아들인 국제질서의 체제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리에 아키라(入江 昭)의 표현을 빌리면 메이지 일본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역할이나 전후 일본의 경제력 중심의 국제적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국제질서 “체제내”의 움직임이었던 것이다.⁶

물론 오늘의 일본이 바로 군사대국화로의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탈냉전 후 세계 정치의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 정치상황에서 볼 때 일본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 모색은 그 정신 상태에 있어서 메이지 일본과 매우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메이지 일본이 택한 군사대국화의 길이 어디까지나 “체제내의 선택”이기는 했지만 이와같은 체제내의 선택이 마침내는 1930년대 후반에 가서 기존 체제의 파괴로 이어졌듯이, 전후 일

4 小澤一郎, 『日本改造論』(東京: 講談社, 1993).

5 *Time*, June 13, 1994.

6 入江昭, 『新・日本の外交』(東京: 中央公論社, 1991), pp. 4-20.

본의 “경제대국화-군사비대국화”라고 하는 체제내적 선택이 탈냉전의 기존 국제질서 해체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할 경우 이것은 국제적 역할 구조의 재편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지금 기존 국제질서의 해체과정에서 “주어진 국제질서에 적응한다”는 메이지 이래의 전통적인 국제적 행동에서 탈피하여 경제력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던 간에 체제내적 행동 패턴이 아닌 새로운 행동 패턴을 보일 경우 일본과 국제 사회간에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III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펴낸 『현대일본사회: 국제화』는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경제대국 일본이 택할 국제적 역할을 세 가지 방향에서 파악하고 있다.⁷ 그 첫째의 패턴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외교-군사대국화의 패턴이다. 이 패턴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주장한 이시하라, 『일본이여! 국가가 되어라』를 외친 시미즈 기타로(清水幾太郎), 일본의 ‘반국가(半國家)’ 상태를 개탄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등의 패권국가 논리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의 패턴은 이른바 ‘보통국가’화의 패턴이다. 이 패턴은 일본이 경제적, 정치외교적, 군사적으로 미국과의 burden-sharing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군사질서를 재구축하려는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이나 자민당 주류의 견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번째의 패턴은 ‘평화국가’화 혹은 비무장 중립화의 패턴이다. 이 패턴은 종래의 사회당과 공산당, 그리고 호헌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평화주의 세력들의 반핵군축외교, 경제협력 등의 비군사적 노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패턴은 각각 냉전 종식 후의 갈등적인 두 개의 움직임인 국경 없는 지구화 시대의 통합 움직임과 분열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일본 국내의 정치세력과 각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기존의 국경을 붕괴시켜 통합을 촉진시키는 한편, 새로운 민족분출을 촉발시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와같은 통합과 분열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국제질서를 재편할지 예측할 수 없다. 과거 초강대국들의 군사적 우위시대는 지나갔고, 미국은 정치·군사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으며, 독일은 통일 경제의 부흥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는 통일 독일의 출현으로 역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같은 통합과 분열의 혼란 속에서 일본이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이니시어티브를 쥐려 한다면 그것은 패권국가의 논리에 따른 군사대국화의 길일 것이며, 대미의존적 국제질서의 유지를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국가화의 패턴이 될 것이다. 그러

7 柴垣和夫, 앞의 글, pp. 363-382.

나 제3의 패턴은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의 자위대 합헌 천명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대안으로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듯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파악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유지해 왔던 미국의 세계전략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일본이 파악해 왔고 또 적응해 왔던 냉전체제 하에서의 미국의 세계전략은 서구와 일본의 경제재건을 통한 대소 봉쇄체제의 구축과 미-소 양극체제의 구축을 통한 다극체제의 내재적 불안정 극복이었다. 이와같은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자체의 경제적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상대적 쇠퇴 속에서 미국이 이와같은 세계전략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상호 의존관계, 특히 일본에의 의존을 통해서만 이러한 전략의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상호 의존관계 형성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⁸

사실 페르시아만 전쟁 발발 이전인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대미 인식은 Paul Kennedy의 「강대국 흥망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즉 overstretch된 세계전략으로 쇠퇴의 길에 접어든 강대국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쓸데없는 낭비라는 인식과 함께 미-일간의 경쟁력 차이를 단순한 경제·기술적 요인보다는 사상적이고 문명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움직임은 될 수 있는 한 미국과의 관계 연장 속에서 국가이익을 향유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일본이 떠맡아야 할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국제정치·군사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탈냉전에 따라 미국이 “평화분배금” 정책을 실행에 옮기면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커밋먼트는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 군사적 커밋먼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이 필요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장개방을 경제전략으로 택할 경우 시장 개방, 투자, 환경보호에 관한 상호주의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여기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미국의 이니셔티브 아래 선진 각국가가 국제질서를 공동운영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팍스 콘설티즈’, 혹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보통국가”화의 개념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⁹

8 C. Johnson, 앞의 책, p. 107.

9 猪口邦子·이노구치 쿠니코, “‘灣戰爭’の世界秩序”, 『日本經濟新聞』, 1991, 3. 19.

IV

일본의 “국제화” 문제는 한마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 상호 의존적인 공존의 틀을 모색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의 국제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 대외 경제문제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경제발전이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일본은 지금까지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경제의 상호 의존체제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GATT 체제의 강화, 발전도상 국가에의 자금지원을 통한 채무문제의 해결, 구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제의 개방화 등이 일본 경제의 국제화 논의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국제화를 논할 때 제기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과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 협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일본사회 자체와 일본의 정책결정 기구 틀을 국제화하는 일일 것이다. 외국의 상품, 서비스, 자본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은 물론 폐쇄된 정책결정 과정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은 개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내개방의 문제는 국제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미트먼트를 수반하는 문제이다. Karel von Wolfereen은 일본은 지금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속에 국내문제를 국제문제와 연관시켜 변혁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관리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나라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의 정책결정에 관한 영역에서만 그와같은 능력을 발휘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이익이 관련된 중요한 정책 변화의 경우에 필요한 정치적 투입을 동원해야 할 정치가의 역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을 지금 “머리 없는 닭” 혹은 “앞부분이 없는 피라미드”로 표현하고 있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Chalmers Johnson은 일본의 새로운 국제적인 커미트먼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과 주요한 저술가들은 탈냉전 시대의 상호의존적인 국제화의 흐름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보다는 세계경제의 주류인 구미 선진국의 경제 모델과 일본의 경제 모델을 차별화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의한 이와같은 경제의 의식적인 차별화 움직임은 일본의 국제관계가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기반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일본이 직면한 국제화의 문제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의 방위력에 관한 의문을 불식하는 일일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위정책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세계의 군사적 균형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든가, 아니면 탈냉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군사적 힘의 진공상태를 메우려는 일본의 숨은 의도가 표면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10 入江, 앞의 책, p. 201.

일 것이다. 1981년에 시작된 일본의 유사연구(有事研究)는 유사시 “1,000 해리의 sea-lane 방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1,000해리의 방위는 필리핀 근해까지를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의 방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군사력의 잠재적인 강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이른바 burdern-sharing을 통한 방위비의 지속적인 증가, 8,900톤급 이지스 탑재 구축함의 건조, 플루토늄의 비축, 4조 엔을 넘는 방위비 그리고 군사대국화를 억제해 온 4대 정책과 헌법의 억제요인 형해화 등은 많은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4개의 비공식적인 억제요인인 비핵 3원칙과 무기수출 금지, 방위비의 GNP 1% 내 유지, 해외파병 금지 등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핵 3원칙은 미 항공모함의 요코스카 모항화와 플루토늄 수입에 의하여, 무기수출 금지는 1983년의 대미 군사관련 기술 이전합의와 SDI 참가합의에 의하여, 방위비 1% 틀은 나카소네 내각에 의하여, 그리고 해외파병은 PKO 법안에 의하여 각각 무효화되어 버렸던 것이다. 또 남아 있는 마지막 억제장치인 헌법 제9조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 조사회”의 위원장인 오자와 이치로에 의하여 공격받고 있다.¹¹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데 대한 불안이 일본 국내는 물론 인근 아시아 각국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은 “일본인에게 군사작전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초콜릿에 알콜 음료를 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견해를 확산시켰다.

세번째로 이리에 아키라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개방과 국제화는 근본적으로 일본 사회와 일본 문화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일본이 제아무리 국제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적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적으로 일본인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즉 일본이 제아무리 표면적인 개방화와 국제화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일본인들의 태도가 배타적이고 예외주의적으로 남아 있는 한 문화교류를 일본 외교의 3대 기둥(안전보장과 경제교류와 더불어)의 하나로 삼겠다는 일본의 시도는 공념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¹² 일본은 지금 유럽 통합과 NAFTA 결성에 따른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시대”에 착목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국내의 사회, 문화적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 또 그와같은 각오도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남경 대학살, 중군 위안부 문제, 천황의 과거사 사죄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 국내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아직도 아시아 각 국가에 대한 사고와 태도의 개방화와 국제화보다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 보다 자신들이 우수하다는 배타적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장개방과 방위책임, 그리고 문화의 국제화를 둘러싼 일본의 새로운 움직임은 미국과의 대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의 표현처럼 미국과 일본은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지위(status) 경쟁, 자본주의 모델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

11 C. Johnson, 앞의 책, p. 154.

12 入江, 앞의 책, pp. 262-263.

립, 글로벌-파트너십에 있어서의 분업 형태를 둘러싼 마찰, 그리고 지역적 영향력을 둘러싼 이해갈등에 직면하고 있다.¹³ 이와같은 대립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미-일 관계의 정립이야말로 국제화 시대의 일본 외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미-일 관계의 구축은 정치-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인정하는 위에서 경제 문화적 상호의존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문제점은 이와같은 방향전환을 시도할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있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APT 32-602

Tel : 880-6341(O), 794-7071(H)

13 Funabashi Yoichi, "Japan and America: Global Partners," *Foreign Policy*, No.86 (Spring 1992), p. 164.